

# 주간 통일정세

2015-28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귀순' 북한선원 3명 송환 거부에 강력 반발(7/14,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귀순 북한 선원 3명 송환 거부에 대해 “괴뢰패당은 조난당한 우리측 주민 3명을 ‘귀순’이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송환을 거부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강력 비난함.
  - 이어 “14일 오전 관문점에 나와 흩어진 가족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절규하며 혈육과의 직접 대면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난도질하고 끝내 3명을 송환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관문점에서는 생때 같은 혈육들과 헤어지게 된 아픔을 피터지게 호소하며 남편과 아들과의 면회를 요구하던 가족들이 실신하여 쓰러지는 참상까지 빚어지게 되었다”고 호소함.
  - 그는 “괴뢰패당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억류한 우리 주민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남측 대화 티령은 기만…자기부터 움직여라”(7/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은 15일 담화를 통해 “요즘 남조선 괴뢰당국자들이 마치 북남관계의 개선에 관심이라도 있고 대화에 성의가 있는 듯이 입나발을 곧잘 붙어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진심 아닌 흑심으로, 진리가 아닌 허위로 더 이상 민족을 우롱해대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방을 움직일 생각이 진정이라면 자기부터 움직이면 될 것”이라고 주문함.
  - 그는 올해 북한이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남한이 이를 매도했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한 당국에 돌리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대북 금융제재 등을 언급하며 “용납 못할 대결 망동”이라고 혈뜰음.

- 북한 민화협 “선원 송환 거부, 남북관계에 엄중한 영향”(7/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은 남한 당국이 최근 구조한 북한 선원 3명을 송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15일 담화에서 “괴뢰패당은 주민의 송환 문제가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예한 문제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모두를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지역에 비법적으로 들어왔던 남조선 주민을 모두 되돌려보냈다”며 “공화국에서 살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까지도 설복해 돌려보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한 “남북관계 파탄 남한 책임…대결 양심 버려라”(7/1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5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의 남북대화 호응 및 對北 협력’강조(7.10, ‘통준위’)에 대해 “어떤 요설로도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속에 품은 대결 양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올해 북한이 화해와 단합의 국면을 열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서 남한 정부가 이에 “외세와 합동군사연습으로 대답하고 정부 성명에 대해서도 ‘부당한 전제조건’이니 뭐니 하고 헐뜯으며 대결불집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이어 남북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북한에 묻는 것은 “낮가죽이 곰발바닥같은 과렴치한들의 해괴망측한 사기광대극”이라며 남한 정부에는 “애당초 대화와 협력을 입에 올릴 체면도 자격도 없다”고 역설함.
  
- 북한, 선원 미송환 연일 비난…“귀순은 날조”(7/17,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TV)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17일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측이) 우리 선원 5명을 따로 방에 가두어놓은 다음 한 사람씩 불러내 귀순을 강요하는 의향서를 쓰도록 강박했다”면서 “귀순은 완전히 허위 날조이고 모략”이라고 주장함.
  - 이어 “선원 3명을 붙잡아두고 부모 처자들과의 생이별을 강요한 것은 비열하고

악랄한 인권유린범죄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도발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임.

- 우리민족끼리TV도 한국행을 선택한 북한 선원 3명의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내보내며 귀순을 남측의 정치적 모략극으로 몰아감.

■ 북한, 국회의장 회담·서울안보대화 초청 모두 거절(7/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9일 서기국 성명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남북국회의장회담 제안 및 국방부의 서울안보대화 초청에 대해 “남북대화를 추악한 정치적 농락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함.
- 조평통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 입으로만 뉘척대는(지껄이는) 대화 타령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내외 여론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을 초보적인 자격을 갖추자면 이제라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 공동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움.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귀순 선원’ 가족 기자회견…“귀순은 모략·날조”(7/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 공화국 국민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억류된’ 주민 3명의 가족·친척과 14일 송환된 주민 2명이 관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힘.
- 통신은 먼저 “가족·친척들은 기자회견에서 혈육이 공화국을 배반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직접대면확인조차 거부하며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처자를 생이별시킨 괴뢰패당의 비인간적 망동을 단죄했다”고 밝힘.
- 가족·친척들은 항의문을 발표해 “혈육들이 귀순한 것은 남조선 당국이 억지로 꾸며낸 모략이자 날조”라며 비난하고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란다면 지체없이 억류한 혈육들을 부모와 처자의 품으로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함.
- 통신은 또 송환된 주민들이 “혈육이 기다리는 공화국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기들을 서로 격리시키고 갖은 유혹과 공갈, 회유와 기만으로 ‘귀순 공작’에 미쳐 날뛴 괴뢰당국의 비열한 책동을 폭로했다”고 주장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올해 첫 남북회담 냉랭…남북관계 기대에도 ‘찬물’(7/17,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가까이 개성공단에서 진행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번 남북공동위에서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남측은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또 남측 대표단이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선 개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노동생산성과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16일 현지에서 진행됐다”며 “회의에서는 개성공업지구운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소개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귀순 선원’ 제외 北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송환(7/14, 연합뉴스)
  - 정부가 14일 판문점에서 남북 접촉을 갖고, 지난 4일 우리 해경이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중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을 송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늘 오전 11시에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북한 선원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히고, “북한 선원 2명이 송환되고 나서 북한 취재진이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북측에서 관련 보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북측은 선원 5명을 모두 넘겨받으려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14일 판문점으로 나왔지만, 2명의 선원만 송환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고 뉴스는 전함.

- UN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北인권백서-2015 발표, 대북금융제재 공포 관련 ‘대화과 압박 병행전략에 따른 본질상 북남관계 파괴, 북침전쟁도발책동’이라고 비난 및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종착점은 전쟁’이라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7.13,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우리 해군 1함대의 종합전투훈련과 ‘수방사’의 적 침투대비 군경합동훈련 실시 관련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반통일적 망동,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중국적 멸망을 앞당기는 자멸행위’라고 주장(7.1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제3국적자(북한과 무기거래 협의) 금융제재 대상 지정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등을 거론하며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정책 때문’이라며 ‘북남관계개선의 전도는 괴뢰당국의 대결정책철회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7.14,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남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 행위’라며 ‘남조선의 한심한 인권실태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비난(7.17, 평양방송)
- 우리 정부의 ‘대화과 압박 투트랙 전략’은 “결코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괴뢰패당이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양면술책에 매달리는 한 북남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비난(7.17,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대통령 등 ‘남북대화 및 對北 협력 노력’을 ‘저들의 범죄적 대결기도를 가리우고 반공화국 도발을 강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기만술책의 대결타령’이라고 왜곡 비난 지속(7.18, 중앙통신·노동신문)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오바마에게 “의원과 장차관 거느리고 찾아오라”(7/1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상하원 의원 535명과 행정부 장차관들을 모두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찾아오라”고 권유함.
  - 북한 최고 권력 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3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이 탄저균 생산시설이란 미국 측 주장을 강력 부인하며 직접 방북해 확인할 것을 제안함.



- 국방위 대변인은 “그 기회에 첨단을 돌파한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진짜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어떤 것인지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위상을 허물어 보려고 서푼짜리 음모와 모략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면서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탄저균 생산시설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라고 꼽음.
- 북한 외무성 “미국 대북제재 강경대응 의지만 강화”(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그를 통해 제도 전복을 이뤄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8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함.
  - 그는 “신동혁을 비롯한 탈북자들이 거짓 증언을 인정하였으며 적대세력들이 인권 소동의 앞잡이로 써먹고 있는 탈북자들이라는 것이 돈에 매여 허위증언에 나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함.
  - 그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압박 소동에 계속 매달릴수록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반동성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며 우리의 강경대응 의지만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핵포기·비핵화는 잠꼬대 같은 소리”(7/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언제면 개꿈에서 깨어나겠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구의 핵 포기니 비핵화니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계속 쉼쳐대는가(지껄이는가)”라며 남한 당국을 비난함.
  - 매체는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했다”면서 “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고 주장함.
  - 또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의 비핵화,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핵전쟁 위험이 중국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였다”고 강조함.

-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어찌 보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진막강한 백두산 총대의 위력으로 짓밟아버릴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그에 붙어 기생하던 괴뢰패당들 역시 참혹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 자. 기타 국가

- 북한, 라오스와 국방 분야 양해문 체결(7/1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3일 평양에서 북한 인민무력부와 라오스 국방성간 협조에 관한



양해문이 체결됐으며 체결식에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장성과 생누안 사이냐랏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멕시코 억류 중인 북한 무두봉호 선원 33명 모두 귀국”(7/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멕시코 현지 매체 ‘E-veracruz’를 인용해 무두봉호가 억류된 투스판 항구 운영 관리자가 “지난 15일 북한 선원 13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고 17일 보도함.
    - 선원들이 귀국하기 전날인 14일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 두 명이 투스판 항구에 찾아가 억류 중인 선원들의 귀국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책임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RFA는 무두봉호 전체 선원 33명 중 20명이 이미 귀국한데다 이번에 나머지 13명도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선원 전원이 배를 떠나게 됐다고 전함.
- 美 국방성 부장관의 ‘핵무력 현대화계획’ 발언 관련 ‘핵무기 없는 세계를 떠드는 미국의 흥심을 스스로 드러낸 망발’이라며 ‘대조선압살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남아있는 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더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7.13, 중앙통신)
  - 美-日 군사적 결탁 관련 ‘인류의 영원에 배치된 세계대전 발발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이 침략적인 야심으로 지배주의적 야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주장(7.1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김영남, 7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과 담화(7.13, 중앙통신)
  - 김영남-리수용(외무상), 7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세계관광기구대표단과 담화(7.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신중수), 7월 13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연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7.13,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연구원의 ‘평양생물기술연구원 탄저균 생산 가능성’ 주장에 대해 ‘대결미치광이들의 역겨운 추태’라며 ‘저들의 흉악한 세균전 도발기도를 가리고 내외의 눈길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7.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카터 美 국방장관의 ‘러시아 공격에 대비해 동유럽 국가들에 무기 지원’ 계획 발표 관련 ‘러시아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며 ‘이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불러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7.14, 중앙통신·노동신문)
  - 러시아 사할린에서 조선인 강제징용자 명단 수록 일본 정부 문서 발견 관련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엄연한 역사의 진실’이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유일한출로는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라고 주장(7.14, 중앙통신·민주조선)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7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라오스 대사(폰캄 인타부아리)와 담화(7.14, 중앙통신)

- 강석주(당중앙위 비서), 7월 14일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단장 : 조나단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담화(7.14,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대학생 등 ‘안전보장관련법안’ 국회채택 반대투쟁(시위·서명운동)은 “자기 나라가 군국주의 길,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7.15,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주한미군 핵무장화 공포(‘57. 7. 15)’를 거론하며 “조선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 선동(7.15, 평양방송)
- 로철수(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안화사(고려시기 역사유적) 개건보수(지난해 10월 北 민족유산보호지도국-駐北 독일 대사관, 개성시 역사유적 보수협조 합의에 의해 진행) 성과적 진행 및 “민족유산보호사업 위해 여러 나라들과 협조” 강조(7.15, 중앙통신)
- 김영남·리수용(외무상), 7월 16일 이임 駐北 모잠비크 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7.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7월 16일 駐北 베네수엘라 신임대사(이반 안토니오 세르빠 게레로)와 담화(7.16, 중앙통신)
- 총련상공회의일꾼대표단(단장: 은종인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부이사장)과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단장: 최홍해·김세정), 7월 1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7.16,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무부의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관련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정치협작·모략문서’라며 ‘진짜로 인권이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할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7.17,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전술핵폭탄 <B-61 MOD 12(LEP)> 시험비행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타령은 저들의 지배주의 야망을 가리우려는 연막”이라며 ‘미국의 비핵세계 및 핵무기 현대화책동 중단’ 주장(7.18, 중앙통신)
- 북-러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관련 ‘복잡다단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도 두 나라 관계가 끄떡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굳건한 초석으로 되고 있다’며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7.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소비자 요구에 귀 기울여라”(7/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락랑위생용품공장의 현지지도에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시하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위생용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좋을수록 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적했다고 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특히 “상표 도안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면서도

고상하고 문화성 있게 잘 만들며 상품 포장 방법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14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현지 지도에는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을 비롯해 김양건 당 비서, 리재일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재외공관장 회의 소집…해외파견관들 ‘다잡기’(7/15,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제43차 대사회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리수용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또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우리 당의 대외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며 참가자들에게 거듭거듭 뜨거운 사랑과 고무를 안겨주셨다”며 “참가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고 전함.
  - 노동신문이 15일 공개한 기념사진에서는 맨 앞줄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양옆에는 리수용 외무상과 김계관 제1부상이 앉았고 리 외무상 곁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전희정 외무성 부상, 김계관 제1부상의 옆에는 대미외교 담당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각각 자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형제인 김평일 체코 대사와 이복 매제인 김광섭 헝가리 대사는 두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네번째에 나란히 자리함.
  - 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유엔대표부 공사를 지낸 김명길 외무성 아태국장과 허담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장남인 허철 외무성 당비서도 기념촬영에 배석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노동당 내각 간부 40대로 바뀌는 움직임”(7/13, 자유아시아방송; 7/14, 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평안북도 한 간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년 내에 실무 간부들을 젊은 사람으로 바꾸라’라는 지시를 내려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국장급 간부들도 대부분 40대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당과 내각의 간부가 40대로 교체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최장수 중국 주재 전 북한 대사 주창준 사망(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1세로 사망한 중국 주재 북한 대사 가운데 최장수 재임 기록을 가진 주창준 전 대사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빈소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주 전 대사는 앞서 1959년 군 소장(별 하나)을 달고 군사정전위 북측 수석대표로 활동했으며 1975년 1월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 북측 대표로, 1985년 7월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대표단 단장으로 각각 활약했음.
  
- 산케이 “북한 황병서-김원홍 치열한 권력투쟁”(7/19, 산케이 신문)
  -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 서열 1위와 4위로 각각 추정되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사이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19일 '한반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의하면 지난 봄 현 부장 숙청 직후 김원홍 부장의 부하 4명이 김 제1위원장 참석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경죄로 처형됐는데, 보위부 조사 결과 이들 4명에게는 행사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의 갈등은 2012년 4월 김원홍이 보위부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산케이는 소개했으며 김 부장이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던 황 국장 부부를 수뢰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했고, 황 국장 부인은 엄중한 취조를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김일성 동생 김영주 95살 고령에도 지방의회 투표(7/19,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19일 “김영주 명예부위원장이 평양시 제271호 선거구 제32호 분구에서 평양시 대의원 후보자인 장수원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고성봉과 삼석구역 대의원 후보자인 장수원협동농장 농장원 김춘길에게 투표했다”고 보도함.
  -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100세를 바라보는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9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은 불편해 보였지만 특별한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듯 보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다. 공식 행사

- 북한, 전국노병대회 준비...‘노년층 다독여 체제 결속’(7/1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국해방 일흔 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 돌이 되는 올해 전승절을 맞으며 제4차 전국노병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다”고 보도함.
  - 통신은 “대회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항일의 노투사들과 전쟁노병들, 전시공로자들과 비전향 장기수들, 전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위훈을 떨친 노병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노병들을 혁명 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회 준비사업이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 속에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함.
  
- 북한, 지방의회 선거 종료...투표율 99.97%(7/1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북한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각지의 모든 선거장에서 투표가 일제히 시작돼 최종 투표율 99.97%를 기록했다고 보도함.
  - 매체는 “해외에 가 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북한, 내달 13~15일 광복 70주년 민족통일대회 개최(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13~15일 민족통일대회를 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백두산에서 자주통일 대행진 출정식을 시작으로 평양과 판문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주통일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통신은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는 각계층의 남녀 동포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밝힘.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은 지시에는 오직 ‘알았다’는 대답만 있을 뿐”(7/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야전형의 지휘성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우리 인민군대 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 당의 결정 지시에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른다”고 밝힘.
  - 신문은 “명령 지시에 대한 절대성·무조건성이 혁명 군대의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군 지휘관들처럼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 당의 결정 지시에 오직 ‘알았습니다’로 대답하는 일꾼이 바로 당과 뜻을 같이하는 참된 동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군 지휘관들에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서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당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입장과 자세”를 주문함.
- 북한, 김정은 ‘원수 칭호’ 3주년 맞아 ‘절대 충성’ 독려(7/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백두산 대국 강성변영의 기상을 힘 있게 떨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실을 비롯해 2면, 5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김정은 제1위원장 ‘띄우기’에 나섬.
  -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해 드린 것은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획기적 전환의 이정표를 아로새긴 역사적 사변이며 반만년 민족사의 대경사, 대행운”이라고 자평함.
  - 신문은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고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고 ‘목숨으로’ 김 제1위원장을 사수하자고 강조함.

- 당 창건 70돌 관련 ‘오늘의 공격속도를 더욱 높여 성과를 확대하고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며 ‘분발하여 올해의



- 총공격전에서 승리를 이룩하자'고 호소(7.13,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현지요해(7.1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주년을 빛내이기 위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궐기모임, 7월 14일 최룡해(당중앙위 비서)·전용남(「청맹」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7.14, 중앙통신)
  -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사업 7월 15일 완료 및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를 선거구 등 공시 및 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준비사업 마감단계' 추진(7.15, 중앙통신)
  - 2월17일 과학자기술자돌격대운동 개시 40돌 기념 중앙보고회, 7월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7.17, 중앙방송)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박봉주(내각 총리)·임철웅(내각 부총리/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7.18, 중앙통신·7.17, 민주조선)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김정은 '국산품 장려' 지시 후 북한TV에 외제상표 사라져(7/16, 관련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수입병'을 질타하며 국산품 애용을 지시한 이후 조선중앙TV에서 외제상표가 사라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16일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프로그램 '정구 운동을 대중화하여'를 분석한 결과, 외제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착용한 북한 주민들이 영어로 된 외제상표를 검은색이나 흰색 테이프로 가리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나. 주요 조치

- 북한, 내각 회의 열고 식량생산 증대 방안 논의(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자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인용해 박봉주 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18일 밝힘.
  - 회의에서는 임철웅 내각 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올해 알곡생산 계획 수행을 위한 역량 집중 문제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끝내야 하는 공사들이 논의됐음.
  -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관철 사업 및 상반기 경제계획 수행 성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3·4분기 과업 및 달성 방안을 협의했다고 통신은 전함.



## 다. 경제 상황

- 유엔 “작년 영양실조 북한 어린이 38% 증가”(7/17, 미국의소리)
  - 지난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를 받은 어린이 수가 전년보다 38%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17일 보도함.
  - OCHA는 북한에서 지난 18개월간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마실 물, 농업용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관광 활성화에 총력...세계관광기구와 양해각서(7/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성걸 북한 국가관광총국 국장과 탈랩 라파이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이 12일 평양에서 양해문(양해각서·MOU)을 서명했다고 13일 보도함.
- 국제구호단체, 북한에 영양쌀 28만 명 분 지원(7/15, 미국의소리)
  - 국제 구호단체인 ‘스톱 형거 나누’가 북한의 결핵·간염 환자들을 위해 지난 5월 흰 쌀에 콩과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한 8만2천달러(약 9천400만원) 상당의 영양쌀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영양쌀은 미국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을 통해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함.
- “북한서 북중 합작 트럭 생산...상표명은 ‘금매’”(7/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기업인 ‘자참단실업집단’과 북한 ‘응양무역회사’가 지난해 3월 합작으로 ‘금평합영회사’를 설립해 북한에 트럭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이 공장은 중국에서 차체와 부품 등을 가져다 단순 조립하는 방식으로 소형, 중형, 대형 등 다양한 종류의 트럭을 시범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트럭에는 ‘금매’라는 자체 상표가 붙여졌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조선에서 환경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며 '생태환경파괴와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환경보호형 경제건설이 적극 추진되게 된다'고 보도(7.14,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광복 70주년 맞아 3년 만에 대사면 시행(7/14, 조선중앙통신)
  - 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에게 '대사(大赦)'를 실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에서 조국해방 일흔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9일에 발표됐다"고 전함.
  - 통신은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임.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평양 거리에 팔빙수 매장 인기...“더울 땀 빙수가 최고”(7/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삼복철에 들어선 요즘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 산뜻한 매대의 처마 아래에서 차고 시원한 빙수를 들며 기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어 “평양시 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에서 얼음생산 기지를 갖추는 한편 매대를 더 잘 꾸리고 과일즙과 단졸임(과일잼)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세워놓았다”고 설명함.
- 북한 태권도인들 미국 ‘태권도 명예의 전당’에 추대(7/1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 북한의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와 배능만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태권도 명예의 전당’에 추대됐다고 보도함.
  - 매체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6일 북한 평양을 직접 방문해 장웅 총재에게 추대 증서를 전달했다고 전함.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중국, 대북 핵우산 제공 검토할만”(7/16, 연합뉴스)
  -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관계처럼 핵보유국인 중국이 북한에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것을 조건으로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출신인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민족주의보다 더 강력한 것이 북한의 민족주의”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국군 병사 한 명이라도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로 넘어오는 것을 허용할 리 만무하다”고 반박함.
  - 유명환 전 외교장관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핵우산 제공이라는 개념이 가능하지만, 북·중 관계 측면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이 주변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임.
  - 워싱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이 같은 대북 핵우산 제공론이 현실적으로 가용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중국, “이란 핵 타결, 북핵문제에 적극적 본보기 될 것”(7/15, 연합뉴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종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다른 국제적·지역적 핫이슈를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본보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이란 핵문제 자체를 초월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함.
  - 그의 이런 발언들 속에는 이란핵 협상 타결이 수년간 공전을 거듭하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왕 부장은 또 이번 핵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국제적 비확산 체계를

수호했다는 점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고, 각국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협상 방식으로 이 약속을 정착시킬 것이다. 동시에 이란에는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결국 정치적 해결은 실현 가능한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임.

■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美, 北과 진정성 있는 협상 준비되어있다”(7/16,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이란과 쿠바,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이 북한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함.
-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추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며 “이는 이란, 쿠바, 미얀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함.
- 그러나 리퍼트 대사는 대북정책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미국은 회유(appeasement)가 아닌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의지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북한은 이란, 쿠바, 미얀마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그는 “북한은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북미 대화뿐 아니라 남북 대화, 6자회담 나머지 5개 당사국들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은 북한에 가 있다”고 강조함.

■ 웬디 셔먼 美국무부 정무차관, “이란 핵합의 잘 이행되면 북한 다시 생각할 것” (7/17, 연합뉴스)

- 미국 측 대표로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6일(현지시간) “이란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에 따라 제재가 해제된다면 북한은 현재 자신들이 추구하는 위험스런 경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셔먼 차관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 나와 “모든 상황은 독특(sui generis)하며 모두가 자체적인 특성과 역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 또 그는 “내가 북한에 말하려는 한 가지는 고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함.
- 이어 북핵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나는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단합된 전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둠.

■ 북한, 유엔서 ‘지속적 제재 받는 유일국가’로 전략 불가피(7/19, 연합뉴스)

- 유엔 소식통은 ‘이란 핵협상’이 최근 타결되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하다”며 “결국 북한은 이란 핵협상 타결로 미국은 물론 유엔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는 유일한 국가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설명함.
- 현재 유엔 내에는 특정 국가(회원국)를 상대로 ‘상주 전문가’가 활동하는 제재 위원회가 북한제재위원회와 이란제재위원회 등으로 2곳이며,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대상으로 한 상주 제재위원회가 유엔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알카에다는 국가가 아님.
- 이란과 마찬가지로 ‘핵 비확산’ 문제로 구성된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결의에 따라 2006년 유엔에 설치되었고, 현재 8명의 전문가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본부에서 상주하면서 북한 관련 제재 현안을 전담하고 있음.
- 다만,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제재위원회가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2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새로운 이란 결의안에는 이란이 타결된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거의 제재를 65일 내에 복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스냅백’ 조항이 들어 있어서 북한이 유엔의 지속적인 제재를 받는 유일한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님.

나. 미·북 관계

■ 미국, “북한과 대화 열려…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협상”(7/1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함.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북한 핵프로그램 전체를 겨냥하며,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로 귀결된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변했지만, “이란과 북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함.

- 이는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핵 협상에 나선 이란과는 달리,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개발이라는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커비 대변인은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다. 중·북 관계

##### ■ 북한서 북·중 합작 트럭 생산…상표명은 ‘금매’(7/17,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기업이 북한에 트럭 조립공장을 합작 설립해 ‘금매’라는 상표로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는데,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기업인 ‘자참단실업집단’과 북한 ‘응양무역회사’가 지난해 3월 합작으로 ‘금평합영회사’를 설립해 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공장은 중국에서 차체와 부품 등을 가져다 단순 조립하는 방식으로 소형, 중형, 대형 등 다양한 종류의 트럭을 시범 생산하고 있으며, ‘금매’라는 자체 상표가 붙여져 있는 이 트럭은 전량 북한에서 내수용으로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 시진핑 주석, 북·중 접경 연변 조선족자치주 첫 방문(7/17,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하이란(海蘭)강변에 위치한 허룽(和龍)시 동청(東城)진 광둥(光東)촌 등 지린(吉林)성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해 농사실태 등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눔.
- 시진핑 주석은 올해 3월 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지린(吉林)성 대표단 심의에 참석,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에 적응해 동북지역의 낡은 공업기지 진흥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동북 3성(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성)’ 지역들에 주변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주목함.
- 특히 연변자치주는 북·중·러 3국의 접경지대로 투먼(圖們)·훈춘(琿春) 등지의



대북·대러시아 통상구를 통해 접경무역이 활발히 이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 국가전략에서 복합적인 중요성을 가짐.

-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3국 경제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이번 북·중 접경 도시 방문이 수년째 냉각된 북·중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시진핑 주석 연변행은 대북 신호·접경 ‘동북진흥’ 메시지(7/17, 연합뉴스)

- 연변이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이번 지린성 방문이 집권이후 소원한 관계인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과 동시에 이 지역을 발판 삼아 북한-중국-러시아 3국을 잇는 ‘동북진흥’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다용도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됨.
- 시 주석은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아직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한국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 지도자와 만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임.
- 동북 3성(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성)은 중국 제조업 기지로 이전 세기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낙후된 시설로 중국 경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지린성 성도인 창춘(長春)에 있는 중국 고속철회사 중차(中車)를 방문하였는데, 중차는 고속철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
- 연변자치주는 특히 북·중·러 3국의 접경지대로 투먼(圖們)·훈춘(琿春) 등지의 대북·대러시아 통상구를 통해 접경무역이 활발히 이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 국가전략에서 복합적인 중요성을 가짐.

■ 시진핑 주석, 지린성에 ‘일대일로’ 점화…北中 경험 청신호(7/19,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린(吉林)성을 찾아 연변조선족자치주, 창춘(長春)시 등에 있는 농촌, 국영기업을 잇달아 방문해 ‘뉴노멀(New normal·신상태)<新常態>’과 일대일로의 핵심인 ‘대외개방’, ‘국제협력’을 강조하였는데, 이 같은 방문은 시 주석의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됨.
- 그는 무엇보다 북·중·러 3국 간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 사업에

대해 “창지투 개방 선도구를 설치한 것은 중앙(당과 정부)의 중요한 조치”라며 “국경지역을 개방해 동북아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동북지역 등의 옛 공업기지를 진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함.

- 무엇보다 ‘차항출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 실현’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북한, 러시아 항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내비쳐 북한의 나선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측 경협이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한편, 그가 조선족 최대 집단 거주지인 연변을 ‘지린성 시찰 1번지’로 선택한 것은 소수민족 안정화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연변은 조선족들이 한국 등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소수민족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 지역임.

##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기타

- 유엔, 중국에 탈북자 강제복송 해명 요청(7/15, 연합뉴스)
  - 유엔 사무국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중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와 관련한 사안’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해 8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고된 탈북자 29명에 대한 신상 확인을 요청함.
  - 중국 정부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가입 국가로 제5차 정기국가 검토 보고서를 유엔 고문방지에 제출했고, 고문방지는 이를 심의 인준하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이번 문건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전달한 입장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의 답변이 주목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한·미, SOFA 운영절차 개선키로...‘탄저균 배달사고’ 논의(7/15,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9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안건이었던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등 현안을 논의함.
  - 외교부는 특히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는 SOFA 협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그러나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대책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 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 이후 나올 전망이다. 한편, 한·미 양측은 SOFA 분과위 현안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한 환경·노무·범죄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 미국, KF-16 성능개량사업 2조8천억 원에 해외군사판매 승인(7/16,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25억 달러(한화 약 2조8천억 원) 규모로 승인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사업청이 희망하는 총사업비(1조7천5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KF-16 성능개량은 공군이 운용하는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임.
  -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총사업비 1조7500억 원 내에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방사청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사업자인 록히드마틴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는 동맹인 한국의 안보와 방어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미국의 해외정책과 국가안보 목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KF-16 성능개량 사업은 가시적인 미래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함.

- 미 육참총장, “병력 감축으로 북한 오판 가능성”(7/19, 연합뉴스)
  - 다음 달 퇴임하는 레이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병력 규모가 감축되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고 17일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함.
  - 미국 육군성은 지난 9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현재 49만 명에 이르는 미국 육군병력이 앞으로 4년 이내에 42만 명으로 감축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현재 2만 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오디어노 총장은 “나는 병력감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응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잠재적 적국들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미국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걱정된다”며 “푸틴이 오판할 수 있으며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고 말함.

## 나. 한·중 관계

- 한·중, 메르스로 침체된 유커관광 정상화에 ‘공동노력’(7/14, 연합뉴스)
  - 한국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유커(遊客)관광’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당국도 이런 행보에 적극 가세키로 함.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리진자오 중국 국가여유국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중 관광교류 확대 협력 방안에 합의했으며, 한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내달 20~21일 정치, 예술, 학술, 여행, 매체분야 인사 등 모두 500명 규모로 구성된 ‘한·중 우호교류단’을 중국에 파견키로 함.
  -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국 정부가 광저우에 입국한 한국 메르스 환자를 잘 치료하고 보호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올해 ‘중국관광의 해’에 이어 내년에는 ‘한국관광의 해’가 이어지는 만큼 양국의 관광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리 국장은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여행경계 조치를 취할 때에도 중국 국가여유국은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한국의 메르스 방역 조치를 지켜봤고 메르스 퇴치 조치에 대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함.

-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상호 보완적”(7/15, 연합뉴스)
  -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언급하며, “두 구상은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포용성과 개방성을 통해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밝힘.
  - 그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연계돼 추진된다면 대륙과 해양이 연결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만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이 협조해 중국의 노후공업지대 개발전략 등 동북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역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주 수석은 동북아 개발은행 추진을 언급하며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고 협력의 장으로 나올 때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중 협력, 남·북·중 협력 등 여러 수준의 협력사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 다. 한·일 관계

- 유홍수 주일대사, “한·일 정상회담, 올해 안에는 열릴 것”(7/15,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홍수 주일본 한국대사는 일본 구마모토 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사이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따로 열 수 있다”며 “올해 안에는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유 대사는 “양국 관계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에 양국 정상이 상대국 대사관 개최 행사에 각각 참석한 것과 일본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때 조선인 노동자 동원 사실을 반영하도록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을 예로 들음.
  - 유 대사는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설이며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끌려와 노역한 현장인 미이케(三池) 탄광 만다(万田)갱을 견학함.
- 일본 정부, “日사찰서 도난당한 불상 반환은 당연”(7/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한국 철도단이 일본 신사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한 한국 검찰의 결정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함.

- 한국 대검찰청은 절도단이 2012년 쓰시마섬 가이진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신사 측에 돌려주기로 했으며,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작품으로 정상적 교류 혹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로 일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 이어 스가 장관은 한국인 절도단이 동조여래입상을 훔칠 당시 인근 ‘간논지(觀音寺)’라는 사찰에서 함께 훔쳐온 고려불상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서도 “조속히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임.
- 정부, “日방위정책, 우리 안보·국익 영향시 동의 있어야”(7/16, 연합뉴스)
    -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해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국방부도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 “일본에서 안보법제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면서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일 3국 안보현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틀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실무자급에서 미·일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국방부가 일본 내 안보법제 제·개정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DTT 틀 내에서 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간다는 입장임.
  - 일본 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법안 추진일지(7/16, 연합뉴스)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함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다음은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추진 관련 주요 일지임.
    - 2014년 7월 1일 =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 방침 각의 결정(헌법 해석 변경)
    - 2015년 5월 15일 =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용인 결정을 반영한 11개 안보 법률



## 제·개정안(일명 집단 자위권 법안) 각의 결정

- 2015년 6월 4일 = 중의원 헌법심사회서 여당 측 참고인인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 등 헌법학자 3명 전원 집단 자위권 법안 위헌 표명
  - 2015년 7월 15일 =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법안 중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강행 처리
  - 2015년 7월 16일 =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법안, 중의원 본회의서 강행 처리
-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 2년만에 개최…北위협 논의(7/16, 연합뉴스)
- 국방부는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미야가와 다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과 2년만에 연례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을 가짐.
  -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평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한·일 국방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미군포로 사죄 일본 미쓰비시, 한국 피해자 문제에 “대답 삼가겠다”(7/17, 연합뉴스)
- 강제 동원된 미군 포로에 사과하기로 한 일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 관계자는 2차 대전 중 동원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사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것에 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이므로 대답을 삼가겠다”며 회피로 일관함으로써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또 왜 한국인 피해자는 외면하면서 미군 포로에게만 사죄하기로 했느냐는 물음에는 “(미군 포로에게 사죄하는) 19일 이후에 대응하고 싶다”고 반응하였는데, 이는 계열사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소송 중인 점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임.
  - 전쟁 상대국이던 미국의 참전 군인에게는 현지로 찾아가 공개 사죄를 하기로 해놓고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회사 견해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뚜렷하게 대비되는데,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이처럼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일본 정부 반응과도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됨.
  - 주미 일본대사관 측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인 포로 징용 문제를 2009년과 2010년 공식 사과했고, 아베



총리가 최근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정치적 액션을 보인 것 등을 일본 기업이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옴.

- 자위대 수장,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수지원 역할 한정”(7/17,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의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16일 (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일 동맹의 전환과 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군수지원(logistical support)에 한정된다고 밝히고, “이것은 설령 안보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자위대 수장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군수지원’에 한정된다고 공개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력을 확장해 나가려는데 대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임.
  - 가와노 막료장은 “만일 한반도에 비상사태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주변사태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수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정부가 안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무제한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함.
  - 그는 또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 같은 공동훈련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일본 집권당, ‘징용은 강제노동 아니다’ 홍보 촉구(7/17,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이하 특위)’는 조선인 노동자 징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대로 알리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알렸는데, 이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노역 문제 등에 관해 이런 제안을 담아 전할 계획임.
  - 특위는 일본 산업시설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강제 노역을 알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제대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또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국제사회의 이런 시각에 맞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 특위는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역사 문제에 반성, 사죄 등 책임 있는 태도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본의 명예, 일본인의 자존심 등 관점에서 극히 지엽적인 사실에 천착해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 일본, “과거엔 반대 더 심했다”…집단지위권 비판 돌파 시사(7/17,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할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 반대 시위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과거 자위대 출범 당시 헌법학자의 8할 이상이 반대했고, 일미 안보조약 개정 때도 지금의 몇 배, 몇 십 배의 시위가 있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큰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말함.
- 그러나 그는 이어, “지금 결과로 보면 역시 자위대의 활약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있고 일미동맹을 개정한 것이 안전보장과 동시에 경제면에서도 일본이 오늘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함.
- 아베 정권은 9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 절차마저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는데, 참의원에서도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60일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 확실하다고 일본 언론은 예상함.
-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참의원에 집단 자위권 법안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미국의 달라이 라마 생일축하에 ‘발끈’(7/14,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80세 생일을 맞은 달라이 라마를 위해 케리 국무장관 명의로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발레리 자렛 백악관 선임고문을 뉴욕에서 열린 생일 축하 행사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문인 자렛이 생일 축하 행사장에서 달라이 라마와 접촉한 점을 크게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짐.
  -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수차례 항의(교섭)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미국 고위관료와 달라이 라마의 접촉을 진행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힘.
  -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시짱(티베트)이 중국의 일부분이란 점과 ‘시짱’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아 악영향을 제거하고 시짱 독립 세력에 대한 그 어떤 편의나 지지 제공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미 관계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함.
  
- 중국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 박차…미국 안보 위협(7/16,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에 이어 막강한 공격력을 가진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에 본격 나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제임스 액턴 미국 카네기평화연구센터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한 조찬회에서 중국은 최근 극초음속 무인기 실험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실패했지만 연구 개발 속도로 미뤄 언젠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무인기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 본토가 이 무인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군은 지난 1년 반 사이 극초음속 무인기 실험을 4차례 단행했는데, 중국 정부는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 실험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과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으며, 극초음속 무인기가 어느 국가의 어떤 목표를 겨냥할 지도 밝히지 않음.
  - 액턴 연구원은 극초음속 무인기가 방대한 지역을 공격하면 현재 기술로는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다면서 극초음속 무인기로 중요 군사시설과 위성전송장치 등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면 가상 적의 무인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원거리 타격 능력이 뛰어난 극초음속 무기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 공군은 지난 2010년 5월 미국 보잉사(社)에서 제작한 극초음속 무인기인 X-51A의 시험비행을 시작한 데 이어 2013년 5월 서태평양 상공에서 제4차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미군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몇 분 안에 공격할 수 있는 X-51A를 앞으로 5~10년 내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美 해군, “남중국해에 연안전투함 4척 이상 배치”(7/19, 연합뉴스)

-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은 지난 17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해 “미군은 잘 무장되어 있고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돌발사건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남중국해에 연안전투함 4척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또 “미 해군은 지역 동맹국과 연계적으로 시행하는 군사연습을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 이 훈련에는 아마도 일본도 포함될 것”이라는 발언도 함.
- 그는 ‘미국은 어느 정도의 군사적 자원을 남중국해에 투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 태평양함대의 약속과 의도를 묻는 것은 결국 이 지역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며 “미 해군 전체가 이곳에 투입되어도 ‘더 추가할 자원이 없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대답함.
- AP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함대인 미 태평양함대는 200척의 전함과 잠수함, 1천100대의 전투기, 14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다고 전함.

바. 미·일 관계

■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공사허가 취소 가능성…아베 정권 ‘촉각’(7/13, 연합뉴스)

- NHK에 따르면 오키나와 본섬 북쪽 헤노코 연안에서 추진되는 미군기지 이설 공사 허가가 위법인지 검토 중인 제삼자위원회는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오키나와 지사가 공사를 승인한 것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정리 중임.

-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는 제삼자위원회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사 허가 취소 여부를 내달 이후 판단할 전망이다.
  - 그는 이에 앞서 일본 정부에 공사를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공사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음.
  - 아베 정권은 기노완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로 옮기는 것이 도심에 기지가 있어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오나가 지사를 비롯한 반대세력은 주일 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이미 오키나와에 집중된 만큼 후텐마 비행장을 현 내부가 아닌 외부로 옮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일본, 수직이착륙 오스프리기 5대 도입키로 최종결정(7/16, 연합뉴스)
- 일본이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5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된 30억 달러(3조 4천440억 원) 규모의 V-22B 블록 C형 오스프리 17대 중의 일부임.
  - 이에 따라 일본은 오스프리를 도입하는 첫 해외 국가가 되는 셈인데, 일본 정부는 이 오스프리 17대를 사가(佐賀)공항에 배치해 육상자위대의 구난 활동과 상륙훈련 지원 등의 장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며, 현재 오키나와(沖繩)의 후텐마(普天間)비행장에는 미국 해병대 소속 오스프리가 24대 배치되어 있음.
  - 오스프리는 지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70여 명이 추락 등으로 목숨을 잃는 등 잦은 사고를 낸 대표적인 항공기이지만, 프로펠러 엔진의 방향을 바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로서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의 장점을 딴 기종이며, 해병대용(MV22)과 공군 특수전용(CV22)으로 구분됨.
  -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병력을 적지 깊숙이 침투시키거나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등 혁신적인 군용기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속 500km 이상인 데다 항속거리도 1천600km나 되며, 공중급유를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대륙 간 비행도 가능함.

## 사. 미·러 관계

- 마러 유럽MD 논쟁 이란 핵협상 타결 뒤 재점화(7/15, 연합뉴스)
  - 미 국무부 관계자는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보호하는 데 충실할 것이라며 유럽 MD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함.
  - 미국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등 ‘불량국가’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고, 러시아는 미국의 유럽 MD 시스템이 자국 핵전력의 상대적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옴.
  - 유럽 MD 문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미-러 양국 관계의 최대 분쟁거리였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자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유럽 MD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촉구함.
  - 라브로프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연설하면서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면 유럽 MD 시스템 구축 과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오늘 미국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켰으며 반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함.
  
- 모처럼 손잡은 마러...오바마 대통령, 연일 푸틴 대통령 칭송(7/1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모처럼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두 정상 간의 잦은 통화는 물론 연일 이어지는 칭찬 세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신냉전 위기를 무색하게 함.
  -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몇 주 전 푸틴 대통령의 전화가 핵협상 과정에서 “큰 힘이 됐다”고 극찬한 데 이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념비적인 협상 타결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이를 연속 ‘푸틴 띄우기’에 나섬.
  - 푸틴 대통령이 건 당시 전화통화에서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협상,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응책에 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NYT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대립한 까닭에 이번 협상이 잘될까 싶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두 사안을 놀라울 만큼 구분해서 임했다. 러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함.

### 아. 중·일 관계

-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중국 방문 결정된 것 없어”(7/13, 연합뉴스)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를 계기로 삼아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이어 중국 측이 아베 총리를 초청했다고 밝힌데 대해 “중국 측에서 여러 설명을 듣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초대장은 도착하지 않았다”고 소개함.
  -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번 초청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중국, 일본 집단자위권법 강력비난…“전후 유례없는 행동”(7/16, 연합뉴스)
  - 중국 대외정책을 관장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가진 ‘중일 고위급 정치회담’서 집단 자위권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리는 엄중한 항의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힘.
  - 양 위원은 또 “국제사회가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을 추구하는 시대에 일본이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와 세계의 대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이 ‘전수방위 정책’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함.
  - 그는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세계 인민이 역사를 깊이 새기고 평화를 갈망하는 시기”라며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함.



- 중·일, 첫 고위급 정치대화…신안보법 문제로 ‘싸늘’(7/16,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들이 베이징에서 첫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지만 회담 분위기는 싸늘했는데, 공개된 일부 회담 내용에 따르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카운터 파트인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에게 “지난해 말부터 중·일 관계 방향은 개선됐고 각 영역에서 대화·교류는 다소 회복됐다”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함.
  - 그는 “올해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과 세계반과시즘전쟁(2차 대전) 승리 70주년이 된다”며 “일본은 마땅히 역사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신호를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아베 총리가 머지않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사죄 등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됨.
  - 양 국무위원은 “이와 동시에 일본은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진정으로 중·일 관계 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며 일본의 군사 재무장 행보 등을 겨냥했으며, 또 “4개의 정치문건”에 기초해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대하는 정신으로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4대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중국은 일본에 강력한 어조를 취함.
  - 중국 측은 다만 이번 회담에 대해 ‘첫 중일 고위급 정치대화’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양측이 중·일 관계 발전은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고위급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냄.
  
- 중국, 아베 총리 책사에 ‘문전박대’(7/17, 연합뉴스)
  - ‘중·일 간 첫 고위급 정치대화’를 위해 지난 16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책사’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 국장을 맞은 중국의 태도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때 ‘문전박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쌀쌀맞음.
  - 중국 측이 공개한 회담 내용만 보면, 양 국무위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안 추진 등 아베 정권의 행보를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중국 외교부는 전날 밤 양국의 첫 고위급 정치대화 결과를 요약해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중국이 신안보법안과 관련해 일본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별도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됐던 아베 총리의 방중 문제나 차기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시 주석은 야치 국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날 항공편을 이용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등 지린(吉林)성 일대에 있는 북중 변경도시 시찰에 나선 상황임.

- 그러나 중국 측의 강경한 ‘외교적 수사’만 가지고 양측의 물밑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 베이징 외교가 일각에서는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아베 담화’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대한 아베 총리의 참석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빅딜’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옴.

■ 아베 총리 책사 만난 중국 국방장관도 ‘안보법안’ 항의(7/17, 연합뉴스)

- 일본 중의원(하원)이 최근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창완취안(常万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81청사(국방부 청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만나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를 거론하며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또 일본은 “아시아 이웃국가들의 우려를 존중하고, 군사안보영역에서 신중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거나 지역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리커창 중국 총리, “日, 역사문제 약속 지켜야”...아베담화 겨냥(7/17, 연합뉴스)

- 리커창 중국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역사 문제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아베 총리가 머지않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사죄 등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됨.
- 리 총리는 이날 오후 베이징에 있는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야치 국장을 만나 “중·일 관계의 좋고 나쁨은 양국 인민의 행복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대하는 정신을 갖고 중일 간 4개의 ‘정치문건’을 기초로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힘.

- 야치 국장은 이에 대해 “일·중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양국의 고위급 정치대화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고, 또 “현재 일·중 관계에는 기회도 있고 문제도 존재한다”며 “일본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며, “역사문제를 직시하고 중국과 함께 대화소통을 유지하며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광복 70주년 맞아 대사면...민심 얻고 이미지 개선(7/14, 연합뉴스)
  - 김정은 정권이 14일 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다음달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해 주목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대사면에 대해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려는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북한은 과거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노동당 창건일, 정권 수립일 등 중요 국가적 기념일의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단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이 새로운 것은 아님.
  -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권력 핵심들을 대거 처형 및 숙청하면서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임.
  - 따라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대사면을 통해 바닥 민심을 얻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옴.
  - 이미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고위간부 등 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면서도 밑바닥 민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음.
  -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수용소에서 부녀자들이 분노통을 나르고 있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엄중한 과오(잘못)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단 1%의 좋은 점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포섭해 재생의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매체들도 재입북 탈북자를 포함해 과거 죄를 지었던 주민들이 현재 체제에 충성하고 있는 모범 사례를 크게 선전하고 있음.
  - 북한은 이번 대사면의 대상이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사면의 대상은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사범일 가능성이 커 보임.
  - 아직은 집권 4년차의 김정은 정권이 권력 집중을 도모할 시점이어서 체제에 반기를 들었거나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된 사범들을 사면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임.

- 대신 사회적 질서를 어기거나 불법적인 경제활동 등 각종 이탈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일반 사범들을 대거 사면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북한 “남측 대화 티령은 기만…자기부터 움직여라”(7/15, 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한 정부의 대화 시도를 ‘기만’이라고 폄하하면서 남측이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의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요즘 남조선 괴뢰당국자들이 마치 북남관계의 개선에 관심이라도 있고 대화에 성의가 있는 듯이 입나발을 곧잘 불어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대변인은 그러나 “진심 아닌 흑심으로, 진리가 아닌 허위로 더 이상 민족을 우롱해대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방을 움직일 생각이 진정이라면 자기부터 움직이면 될 것”이라고 주문했음.
  - 전국연합근로단체는 청년동맹, 직업총동맹(직맹),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여성동맹(여맹) 등 4개 근로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 대변인은 “지금처럼 속에 칼을 품고 체제통일을 이룩할 흥심을 품은 채 세인을 기만하기 위한 대화에 대해 외쳐대면서 또 다른 대결로 시간이나 허송할 생각은 애당초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비난했음.
  - 그는 올해 북한이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남한이 이를 ‘대남전략’, ‘국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화 공세’로 매도했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한 당국에 돌렸음.
  - 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대북 금융제재 등을 언급하며 “용납 못할 대결 망동”이라고 싸잡아 헐뜯고, 남한 정부가 미국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결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헐뜯으며 “5·24 조치 유지가 부동의 원칙이라고 주절대면서도 접촉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궤변”이라고 비난했음.
- 북한 외무성 “미국 대북 제재 강경대응 의지만 강화”(7/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미국이 인권 문제를 내세워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우리의 강경대응 의지만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그를 통해 제도 전복을 이뤄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대변인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8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음.
  - 그는 “신동혁을 비롯한 탈북자들이 거짓 증언을 인정하였으며 적대세력들이 인권 소동의 앞잡이로 써먹고 있는 탈북자들이라는 것이 돈에 매여 허위증언에 나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압박 소동에 계속 매달릴수록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반동성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며 우리의 강경대응 의지만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거짓 증언으로 휴지장이나 다름없다”고 폄하했음.
  - 대변인은 “미국이 험악한 인간 말세의 시궁창에 살면서 인민의 지상낙원,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증상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간섭을 일삼고 불법 도청과 감시를 체계적으로 해왔으며 백주에 흑인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죽이는 미국이야말로 인권 유린의 왕초이며 국제 인권재판의 피고석에 앉혀야 할 범죄국가”라고 비난했음.
- 유엔 ‘지난해 북한 아동 영양실조 치료 38% 증가’(7/17, 미국의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지난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 받은 어린이 수가 전년에 비해 38% 증가했다고 밝혔음.
  - OCHA는 15일 발표한 북한 가뭄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2013년에 비해 38%나 많은 어린이가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급성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 (UNICEF-supported Community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 Program)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이 시기가 지난해 가뭄이 진행됐던 때와 일치한다며, 가뭄의 영향으로 어린이 영양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 특히 가뭄이 올해도 계속된 것을 감안하면 질병에 걸린 어린이가 훨씬 증가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을 수 있다고 우려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현재 북한 내 경구용 수분보충 소금(ORS: Oral Rehydration Salts)이 부족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설사로 인한 어린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어린이 설사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140% 증가했으며,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에서도 각각 71%와 52% 증가했고,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34% 증가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북한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마실 물과 농업용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건과 영양, 위생 상황이 악화돼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올해 대북 지원 활동에 총1억 4백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5일 현재 모금액은 3천3백만 달러로 목표액의 32%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 한편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6월 19일 북한 보건성에 1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의료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음.
  - 크리스토퍼 드 보노 유니세프 대변인은 지원물품에 필수약품과 의료장비가 포함됐으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의료용품을 추가로 주문해 놓았다고 말했음.
  - 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평양, 남포시를 포함해 94개 시, 군에 설사와 폐렴약 등 23개 필수약품을 지원했으며, 지역 병원에 영양제 1천 개를 분배했다고 밝혔음.
- “北주민, 장사는 당당한 ‘권리’…단속 보안원에 집단 반발”(7/17, 데일리NK)
    - 북한 주민들이 장사행위에 대한 인민보안부의 단속에 집단으로 항의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졌음.
    - 최근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 시대 시장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장사행위가 활성화되고 있음.
    - 다만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장사행위에 대한 통제에 과거와 다르게 완강하게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음.

-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장사를 통해 알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행위’를 당국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임.
- 소식통들은 “최근 당국의 시장에 대한 단속이 줄면서 주민들은 이제 장사하는 것을 하나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면서 “보안원들이 특하면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특히 소식통은 “김정일 시대 어찌됐든 장사는 비법(非法)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장사 통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집단으로 반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이제 주민들은 당국이 선전하는 자력갱생의 실천으로 장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보안원의 단속에 대한 반발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함경북도 소식통도 “최근 함흥의 한 시장에서 단속 보안원들과 장마당 상인들 사이의 싸움이 벌어져 상인들과 보안원들이 다쳐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어느 장마당에서나 장사에 대해 단속하는 보안원들과 충돌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배급을 줘야 ‘이제는 장마당이 필요 없다’며 통제를 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데 당국도 배급을 줄 여건이 안 되니 장마당 통제를 할 명분이 없다”면서 “만약 지금 상황에서 장마당을 폐쇄하거나 통제를 하면 주민들은 진짜 그 때는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함경북도 최대 시장인 청진 수남시장에서도 장사 단속 보안원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음.
- 이와 관련 함경북도 소식통은 “얼마 전 (청진) 수남 시장 한 가운데서 60대 장사꾼과 시장담당 보안원 사이에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이날 싸움은 시장보안 원이 시장 내 장사물품들을 검열하는 과정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이를 지켜보던 장사꾼과 행인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 노인편에서 보안원들을 다그치며 몰아세우기 시작했다”면서 “주민들은 ‘노인의 말이 뭐가 잘못 됐나? 배고프니까 시장 나오는 건 당연하지, 너희처럼 배가 부르면 왜 이 고생 하겠냐’, ‘자기 배부르면 남의 배고픈 줄 모른다’며 거세게 반항했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달 말 함경북도 무산군 시장에서 시장 단속 보안원의 장사 물품 압수에 불만을 품은 장사꾼들이 집단으로 저항하는 사건이 벌어졌었고 같은 시기

양강도 해산시에서는 교통 보안원의 단속에 항의하던 한 여성 장사꾼이 길가 난간 밑으로 투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2. 북한인권

- 미 의원들 “북한인권 개선 위해 제재 압박해야”(7/16, 미국의소리)
  - 15일 미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음.
  -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하원의원 여러 명이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음.
  -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연설에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게 됐으며, 후속 조치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H.R. 757)의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주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S.1747)이 발의됐음.
  -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은 북한 정권이 테러 활동 지원과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204)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의 김 씨 정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로레타 산체스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의원들에게 알리는 데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음.
  - 의원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 이산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북한 제재 이행법안’(H.R. 757)과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H.R. 204)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것임.
  - 산체스 의원은 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화당의 톰 맥아더 의원은 ‘북한 제재 이행법안’(H.R. 757)과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H.R. 204)의 의회 통과를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자유연합, 미 상원의원들에 대북제재법 지지 청원서 전달(7/1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상원의원 100명 전원의 사무실에 지난 13일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인편으로 전달됐음.
  -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청원서는 각 상원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작성됐고,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 솔티 대표는 다만 지난주 상원에 ‘북한 제재 이행법안’(S.1747)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에게는 청원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 솔티 대표는 메넨데즈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 측에는 이 같은 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만 알렸다고 밝혔다.
  - 북한자유연합은 2주 만에 1천3백여 명 미국인들의 서명을 받았음.
  - 북한 주민들을 깊이 걱정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점을 상원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청원운동을 시작했다는 설명임.
  - 솔티 대표는 같은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지난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무산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상원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솔티 대표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미 의회가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H.R. 757) 지난 2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또 상원에서도 지난 주 비슷한 내용의 법안(S.1747)이 발의됐음.
  -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돈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음.
  -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음.

- “블라디보스톡 북 건설노동자는 노예”(7/17,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BBC 방송은 북한 노동자들이 한창 작업 중인 블라디보스톡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음.
  - 이 방송은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업이 호황을 맞아 여기저기 아시안 건설 노동자들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북한에서 온 노동자였다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이들은 건설 현장 인근에 단체로 수용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노동자는 자신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로 보내져서 일하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음.
  - 최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은 러시아 극동 주정부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저임금에도 비교적 성실한 북한 노동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임.
  - 북한의 김정은 정권 또한 오랜 경제난으로 외화벌이가 절실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런 와중에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이 때문에 이들은 ‘북한에서 온 노예’라고 불린다는 게 이 방송의 지적임.
  
- DMZ 횡단 여성단체, 미 의회와 유엔서 설명회(7/18, 미국의소리)
  - 지난 5월 북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가는 행사를 열었던 여성단체 ‘위민크로스 DMZ’가 미 하원과 유엔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단체의 집행위원인 정현경 미 유니언신학대 교수는 21일 미 하원 레이번 빌딩과 23일 유엔본부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음.
  - 유엔 행사는 유엔주재 리히텐슈타인대표부와 여성단체 ‘피스위민’ 주최로 열리며, 지난 5월 행사를 담은 기록영화 ‘크로싱’이 상영될 예정임.
  - 정 교수는 특히 하원 설명회를 통해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의원들이 압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진보 성향의 국제 여성 평화운동가들로 구성된 ‘위민크로스 DMZ’는 대화와 용서로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에 영감을 불어 넣겠다며 지난 5월 평양으로 향했음.
  - 이후 북한에서 여러 관련 행사를 연 뒤 버스 편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에 도착해 다시 행사들을 열었음.

- 이 행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씨와 일부 노벨평화상 출신 여성들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었음.
- 하지만 민생보다 권력 유지를 위해 인권 유린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시킬 것이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음.
- 특히 일부 단체들은 이번 하원과 유엔 설명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행사 취소까지 촉구하고 있음.

### 3. 탈북자

- 유엔, 중국에 탈북자 강제복송 해명요청(7/1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이 지난해 8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복송된 것으로 보고된 탈북자 29명에 대한 신상 확인을 공식 요청했음.
  - 뿐만 아니라 유엔은 탈북자가 강제 복송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중국 정부가 마련해 놓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추궁했음.
  - 유엔사무국이 지난달 29일 일반에 공개한 문건 ‘중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와 관련한 사안들’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도입한 2012년 출입국 행정법이 국제법이 규정한 난민 신청자의 신변안전보호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문의했음.
  - 중국 정부는 유엔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대한 협약(CAT·이하 고문방지협약)’ 가입 국가로, 제5차 정기국가검토 보고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 인준한 다음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위원회는 “1세 아이를 포함한 약 29명의 북한인이 2014년 8월 강제 복송됐다는 정보를 접수했다”며 “중국 정부는 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복송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음.
  - 또 위원회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중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강제 복송될 경우 박해나 고문, 장기구금, 때로는 집합소나 수용소 등에서 성폭행 및 강제낙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 해명해 줄 것도 요청했음.



-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 “탈북자가 강제 복송된 후 당하게 되는 고문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은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해 중국은 자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농-르플루망 원칙(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외에도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복송 뿐 아니라 난민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기 심사 기간에 연도 및 출신국가 별로 망명신청자 수, 인도주의적 이유로 인한 망명 승인 건수, 자국으로 신병이 넘겨진 외국인 수와 국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이번 문건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전달한 입장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답변이 주목됨.
- 영 NGO ‘탈북자 차세대리더 양성 프로그램’(7/15,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개인 기부자들의 기금으로 다음주부터 16세 탈북자 용 준 씨와 함께 ‘피닉스’라는 ‘젊은 탈북자 양성 프로그램 (Young North Korean Refugee Mentoring Programme)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기구는 용 준 씨가 유럽북한인권협회에서 한 시간에 약 14달러를 받으며 유급 인턴으로 경력을 쌓게 될 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 그리고 직업 탐색 등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용 준 씨에 이어 20대 초반의 다른 탈북자도 3주 후에 ‘피닉스’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약 5-6명의 탈북자를 지원한다는 게 이 기구의 계획임.
    -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젊은 탈북자 양성 프로그램’ 외에도,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탈북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총 4만 5천 파운드 중 우선 1만 파운드 즉 1만 5천700여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도, 북한 이탈여성 성인지·인권의식 강화 사업 추진(7/16, 서울경제)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북한 이탈여성 성인지 및 인권의식 강화 사업을 추진함.
    - 이 사업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북한 이탈여성 성인지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 △북한 이탈여성 대상 여성인권 교육(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양성평등) △여성인권 기관 방문을 통한 전문상담원

- 지정 및 안내 등이며, 사업 대상자는 도내 전입 북한이탈주민 여성 120명임.
- 김희겸 부지사는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과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북한이탈여성의 성인지력을 향상해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미 본부 구호단체, 첫 대북 지원…영양쌀 28만 5천 명 분(7/15, 미국의소리)
  - 국제 구호단체 ‘스톱 헝거 나우(Stop Hunger Now)’가 북한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해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식량을 지원했음.
  - 이 단체의 줄리 사베인 식량지원 담당관은 북한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을 통해 북한에 영양쌀 28만 5천 명 분을 지원했다고 말했음.
  - 스톱 헝거 나우가 이번에 지원한 영양쌀은 흰쌀에 콩과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첨가된 것으로, 미화 8만 2천 달러 상당임.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이 영양쌀이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에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과거에는 쌀과 메주콩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고기 통조림밖에 보내지 못했다는 설명임.

- 스미스 국장은 앞으로 ‘스톱 헝거 나우’가 기부한 영양쌀을 북한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지난 1995년 설립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매년 약 10차례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담요 등을 보내고 있음.
  - 또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에 온실과 수도 시설,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주는 등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스톱 헝거 나우’에 북한 결핵, 간염 환자들에게 제공할 쌀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음.
  - ‘스톱 헝거 나우’는 올해 초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5월 영양쌀 28만 5천 명 분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선적했음.
- 유니세프 “가뭄 피해 북 주민 추가 지원”(7/16,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은 북한 내 가뭄 피해지역에 북한 보건성의 주관아래 3달 동안 1만 명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필수 기초 의약품이 든 ‘긴급 의료 구호 세트’를 최근 분배했다고 전했다.
  - 북한에서 가뭄 피해가 큰 황해 남북도를 중심으로 평양, 강원도, 함경남도, 량강도 등 6개도의 94군에 대대적으로 긴급 구호 물품을 분배했다는 설명임.
  - 유엔아동기금 ‘긴급 의료 구호 세트’는 설사와 폐렴약 등 23가지 필수 의약품과 영양제 1천 세트로 구성돼 있음.
  - 특히 유엔아동기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사병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수분보충 소금’을 북한으로 더 보낼 예정이며, 급성 중증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바로 먹도록 만들어진 ‘치료용 음식’(therapeutic food)도 선적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 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치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보건과 영양 교육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이 기구는 밝혔다.
  - 이 밖에도 유엔아동기금은 황해북도의 은파군 1천 300가구에 3개월 여분의 수질 정화제, 건강 보조제, 위생용품, 그리고 물 정수기와 양동이 등을 지원했음.
  - 이 기구는 가뭄으로 설사병이 만연한 황해남도에서는 설사병이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를 비교해 올해 5월까지 약 140%나 증가했다고 북한 보건성을 인용해 전한 바 있음.

- 또 북한 내 가뭄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가뭄으로 황해북도 지역에서 총 경작지의 약 58%를 차지하는 1만 6천 871헥타르가 훼손됐으며, 황해남도에서는 총 경작지의 약 80%를 차지하는 8만 5천 892헥타르가 손상됐다고 알렸음.

## 8. 북한동향

- UN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北인권백서-2015 발표, 대북금융제재 공포 관련 ‘대화과 압박 병행전략에 따른 본질상 북남관계 파괴, 북침전쟁도발책동’이라고 비난 및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종착점은 전쟁’이라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7.13,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북남대결 망동이 몰아온 것은 전쟁뿐이다)
- 우리 정부의 제3국적자(북한과 무기거래 협의) 금융제재 대상 지정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등을 거론하며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정책 때문’이라며 ‘북남관계개선의 전도는 괴뢰당국의 대결정책철회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7.14, 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정책은 북남관계 파국을 몰아오는 근원)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7.15),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 제재 방안 관련 증거·정보 검토 등’ 발언(7.8 헤리티지재단 주최 ‘대사들의 대화’ 토론회)은 “우리(北)의 제도전복 실현목적”이라며 ‘강경대응’ 반발(7.16,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